

# 文대통령·尹당선인 회동 연기...靑 “일정 다시 잡기로”

### 회동 의제 조율 과정서 이견...“실무협상 마무리 안돼” 靑·尹측 공기업 인사권 놓고 갈등...회동연기 배경 됐다

16일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연기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오늘 예정됐던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실무 차원에서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실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며 회동 연기 사실을 전했다.

다만 양측은 회동 연기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회담

연기 사유는 양측이 밝히지 않기로 했다”며 다음 회동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도 연기 이유에 대해 “양측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한다”며 “실무자 차원의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회동 연기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의제 조율 과정에서 이견을 노출 연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청와대와 당선인 측은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한 바 있다. 또 윤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 폐지를 밝히면서 현 정부를 겨냥한 데 대해서 청와대가 반발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15일)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 “현재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꼭 필요한 인사일 경우에는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업무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요청이 있었는지 여부는 알고 있지 않다”며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5월9일까지고, 임기 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인사권은 아직 문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민정수석실 폐지와 관련해서도 “정책적 판단의 문제로 과거 국민 의정부 등에서도 일시적으로 폐지한 적이 있다”면서 “다만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들어서 민정수석실 폐지의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당선인 측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 민정수석실의 기능은 민심 청취, 법률 보좌, 인사 검증, 반부패 정책 조정, 공직 감찰, 친인척 관리 등”이라며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은 법령이 정한 업무에 충실한 소임을 다해 왔다는 점을 다시



김재환기자



## 광주서 고개 숙인 ‘민주 비대위’ “윤호중 물러나라” 시위 이어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처음으로 호남을 찾아 대선 패배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호남은 민주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 주셨으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그 성원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호남의 선택이 다시는 아픔이 되지 않도록 뼈를 깎는 각오로 쇄신하고 또 쇄신하겠다. 민주당의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배재정·이소영·김태진·조웅진·채이배 등 비대위

원들이 참석했다.

한편 회의장 밖에는 윤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스스로를 관리당원으로 소개한 이들은 “윤호중 비대위 사퇴” “민주당은 각성하라” “감찰개혁 언론개혁”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시위대의 “윤호중 비대위 물러나라” “사퇴하라”는 구호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대위 지도부는 회의 시작 전 박성준 비서실장의 사회로 “민주당이 광주 시민 뜻을 깊이 새겨 더 낮은 자세로 새롭게 거듭나겠다”면서 90도 사과를 했다.

오유나기자

## 민주당 “MB 정 사면하려거든尹 취임하고 하라” 반발

### 권성동 ‘김경수 패키지’ 발언 발끈도 “부적절” 尹인수위 MB맨 컴백에 “또 실패 반복하려고”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데 대해 강력 반발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을 연계하리라는 관측에는 불쾌감을 드러냈고, 정권 인수 작업을 계기로 MB맨이 대거 컴백한 것에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얼마 전에 박근혜 씨를 사면할 때 MB 사면도 검토가 됐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 결과 상황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국민 법감정이나 이런 것들 고려했을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던 부분”이라며 “지금 와서 다시 당선인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그 당시 판단을 뒤집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선인이 얼마 안 남았지 않나”라며 “취임한 후에 결단 및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당선인 최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문 대통령 입장에서 김경수

를 그냥 놔둘 리 없다. 살려줘야 한다. 100%라며 동반 사면을 호언한 데 대해서 “완전히 권성동 의원의 가정,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나아가 “당원 분들의 경우에는 저한테 문자나 이런 것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기류”라고 전하기도 했다.

영남권 중진인 김두관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상대 당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이런 부분을 현직 대통령에 건의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 사면하고 싶으면 (윤 당선인) 본인이 취임한 이후 하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물러나는 대통령에 대한 짐을 지우는 측면이 있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재벌 사면이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허탈해 하신다”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 측에서 이 전 대통령과 함께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 타협 형태로 김 전 지사를 묶어서 사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정략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했을 때 오는 여러가지 비판과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박광은 의원 역시 KBS 라디오에 출연해 “권 의원의 말씀처럼 마치 그렇게 (MB-김경수) 한 묶음으로 패키지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거는 적절치 않은 이야기”라며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어느 누구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힐난했다.

김영배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경수 전 지사를 언급한 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실시가 된다면 아무래도 다른 여러 정치인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예를 들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라든지 경제인들에 대한 문제도 포함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의원은 김태호 전 대통령 전략기획관이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에 참여한 데 대해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남북관계의 아이콘”이라며 “비핵개방 3000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더욱 멀어지고, 더욱 험해졌다. 그런데 다시 돌고 돌아 김태호 교수인가. 다시 실패를 반복하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서선욱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b>기사제보</b> (062) 222-2580	<b>광고문의</b> (062) 228-2580
-------------------------------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